



Summary

✓ OECD 37개국 중 한국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5년('17~'21년)간 급격하게 하락

국가	종합순위	법인세	소득세	재산세	소비세
	▼ 9단계 ¹⁾ (26위) ²⁾	▼ 7 (33위)	▼ 7 (24위)	▼ 1 (32위)	▲ 1 (2위)
	▲ 0.8단계 ³⁾	▲ 2.6	▲ 0.8	▲ 0.6	▼ 0.2

*주: 1) '17년 대비 '21년 순위 변동 폭, 2) 괄호 안은 한국의 '21년 순위(총 37개국중), 3) G5는 5개국 순위 변동 폭을 단순평균

*자료: Tax Foundation

✓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영활력을 제고하고, 경제성장을 촉진할 필요

❖ 법인세율 1%p 인하 시, 경제성장률 0.21%p, 고용 0.2%, 임금 0.3% 증가

글로벌 조세경쟁력 종합순위 변화('17~'21년)

💡 글로벌 조세경쟁력 순위(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anking)

- ➔ 미국 조세재단(Tax Foundation)이 OECD 37개국을 대상으로, 2014년부터 발표하는 종합 및 분야별(법인세, 소득세, 소비세, 재산세, 국제조세) 조세경쟁력 순위
- ➔ 국제조세는 세목이 아닌 국가 간 과세규율(조세조약, 이중과세 방지제도 등)이므로, 분석대상에서 제외(한국 국제조세 경쟁력 순위: 29위('17년) → 33위('21년))

■ 최근 5년간 한국 조세경쟁력 9단계 하락, G5 국가 대비 가장 큰 하락폭*

*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큰 하락폭

조세경쟁력
종합순위 변화

G5 0.8단계 ▲
VS
한국 9단계 ▼



*자료: Tax Foundation, '17년 대비 '21년 순위 변동

세목별 조세경쟁력 순위 변화('17~'21년)

💡 세목별 경쟁력 지표: ①조세부담(세율·세제지원 정도), ②과세체계

➔ 조세부담이 낮을수록, 과세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음

법인세 경쟁력
순위 변화

G5 2.6단계 ▲
VS
한국 7단계 ▼

▪ 경쟁력 하락 원인
법인세율 인상 및
세제지원 축소

1 법인세: 한국 경쟁력, G5 국가 대비 가장 큰 폭 하락(7단계↓)



*자료: Tax Foundation, '17년 대비 '21년 순위 변동

■ **미국 · 프랑스** 세율 인하 · 과표구간 단일화 등 법인세 부담 완화 vs.
한국 세율 인상 · 과표구간 확대 등 과세 강화

국가	조세부담	과세체계
	❖최고세율 인하('17년): 35% → 21% ❖감가상각비 공제 ¹⁾ 확대('17년): 51만\$ → 100만\$	❖ 과표구간 단일화('17년) :8단계 → 1단계
	❖최고세율 단계적 인하: 33.3%(~'19년) → 31%('20년) → 27.5%('21년)	❖ 과표구간 단순화('20년) :2단계 → 1단계
	❖최고세율 인상('17년): 22% → 25% ❖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²⁾ 한도 축소('17년): 소득의 80% → 60%	❖ 과표구간 확대('17년) :3단계 → 4단계

*주: 1) 기계 · 건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
2) 기업의 손실(결손금)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일정한도로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

소득세 경쟁력
순위 변화

G5 0.8단계 ▲
vs
한국 7단계 ▼

■ 경쟁력 하락 원인
소득세율 인상 및
자본이득세 강화

2 소득세: 한국 경쟁력, G5 국가 대비 가장 큰 폭 하락(7단계↓)



*자료: Tax Foundation, '17년 대비 '21년 순위 변동

■ **일본 · 미국** 자본이득세 부담 완화 ·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vs.
한국 자본이득세 과세 강화 · 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확대

국가	조세부담	과세체계
	❖적립식 펀드 투자수익 20년간 비과세('17년)	❖소득세 원천징수 서류 제출 간소화 추진('18년)
	❖최고세율 인하('17년): 39.6% → 37% ❖표준공제액(소득공제) 2배 인상('17년): (1인 가구) 6,350\$ → 12,000\$	-
	❖최고세율 단계적 인상: 40%(~'17년) → 42%('18~'20년) → 45%('21년) ❖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('20년): 대주주(시총 10억원 이상 보유) → 모든 투자자	❖과표구간 확대 :6단계(~'17년) → 7단계('18~'20년) → 8단계('21년)

재산세 경쟁력
순위 변화

G5 0.6단계 ▲
vs
한국 1단계 ▼

■ 경쟁력 하락 원인
부동산세제 강화 및
상속 · 증여세
개편 노력 부진

3 재산세(상속·증여세, 부동산 보유·거래세 포함): 한국 경쟁력 1단계 하락



*자료: Tax Foundation, '17년 대비 '21년 순위 변동

■ **프랑스 · 미국** 부동산 거주세(보유세) 완화·상속세 기본공제 확대 vs.
한국 종합부동산세(부동산 보유세) 및 취득세(부동산 거래세) 강화

국가	조세부담	과세체계
	❖ 1주택자 부동산 거주세 완화('20년): 하위 80% 면제 적용	❖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 ^{주)} 폐지(부동산에만 부과)('17년)
	❖ 상속·증여세 기본공제액 상향('17년): 549만\$ → 1,000만\$ + α (물가상승률 반영)	-
	❖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인상 ▪ 종합부동산세율(개인 주택분): 0.5~2%(~'18년) → 0.6~3%('21년) ▪ 부동산 취득세율: 1~4%(~'20년) → 1~12%('21년) ❖ 상속세 세율 및 과표구간 22년간('00~'21년) 미개편	❖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확대 (18년): 5단계 → 6단계 ❖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세분화('18~'20년): 개인·법인, 1주택·다주택자 분리

* 주: 고액자산가 재산세: 부동산 · 금융자산 등 합계 130만€ 이상 → 부동산 130만€ 이상

소비세 경쟁력
순위 변화

G5 0.2단계 ▼
VS
한국 1단계 ▲

■ 경쟁력 상승 원인
납세비용 감축 및
낮은 세부담 유지

4 소비세: 한국 경쟁력 1단계 상승



* 자료: Tax Foundation, '17년 대비 '21년 순위 변동

■ **영국 · 한국** 부가가치세율 인하·세원 확대 및 과세체계 단순화 vs.
일본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과세 강화

국가	조세부담	과세체계
	❖ 부가가치세율 한시적(6개월) 인하('20년): 20% → 5%	❖ 전자상거래 통한 저가상품(15£ 이하) 수입 시, 부가가치세 면제 → 과세 전환('20년) ¹⁾
	❖ 부가세 간이과세자 ²⁾ 기준 확대('20년): 年매출 4,800 → 8,000만원 미만 ❖ 부가세 도입('77년) 후 45년간 세율(10%) 유지	
	❖ 부가가치세율 인상('19년): 8% → 10%	-

* 주: 1) 전자상거래 저가상품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로 세원 확대 효과 →

※ 소비세의 경우, 다른 세목과 달리 세원(Tax Base) 확대도 조세부담·과세체계와 함께 경쟁력 지표로 판단

2)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율(0.5~3%)이 낮고, 세금 신고가 간편(ex.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년에 2회 신고, 간이과세자는 1회 신고)

조세경쟁력
강화 시 GDP 등
경제에 긍정적 효과

💡 조세경쟁력 제고의 경제적 효과

- 조세경쟁력을 제고하면 기업 등 경제주체 펀더멘탈 제고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
- ※ 법인세율 1%p 인하 시 경제성장률 0.21%p 상승(조세재정연구원, '16년),
법인세율 1%p 인하 시 고용 0.2%, 임금 0.3% 증가(NBER, '18년)

쟁점과 체크포인트



조세경쟁력 향상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경제성장을 촉진

- ❖ 복잡한 자산거래(부동산·금융 등) 과세체계 및 높은 배당소득세율 등이 **한국의 조세경쟁력을 악화**(Tax Foundation, '21년)
- ❖ **조세제도 단순화**는 납세자의 규제준수시간·비용을 줄이고, 조세 공정성을 높여 **조세 회피 유인 감소**(Tax Policy Center, '20년)

■ 내용문의: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(02-3771-0320), 강현민 연구원(0423), 한호 연구원(0426)



글로벌 싱크탱크 FOCUS



Employment Report Shows Big Government Socialism Is Not Working

최근 고용동향은
큰정부 사회주의가
왜 비효율적인지를
시사

Rachel Greszler
2021. 11월



<https://www.heritage.org/press/heritage-expert-employment-report-shows-big-government-socialism-not-working>

SUMMARY

- 정부의 무노동 복지(Welfare-Without-Work)지출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면서, 미국 사회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 및 실업 문제에 직면
 - *美 사업자 3명 중 2명은 현재 인력부족 상태('21.9월, 전미사업자연맹)
 - *美 인력공급이 '20년 초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경제활동인구 450만명, 취업자 6백만명 추가 필요('21.11월, 해리티지재단)
- 바이든 행정부의 사업장 내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로 기존 취업인구의 이탈 위험도 상존
 - *美 성인인구의 9%가 백신 의무화 도입 시 퇴직을 감행할 것이라 응답('21.10월, 카이저패밀리재단)
- 인력부족으로 인한 원가상승압력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
 - * 민주당의 대규모 증세안도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가계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



Government Policies Cost Americans as Consumer Price Inflation Hits 30-Year High

소비자물가상승률
30년 만에 최대,
미국인이 정부정책의
희생양이 되다

Joel Griffith
2021. 11월



<https://www.heritage.org/press/heritage-expert-government-policies-cost-americans-consumer-price-inflation-hits-30-year-high>

SUMMARY

- 美,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그린에너지 정책으로 물가상승률 30년 만에 가장 높아
 - * '21.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.2% → '90.11월(6.3%) 이후 최대
 - ❖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총수요는 확대 vs 친환경정책 시행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총공급은 위축
- 정부지출 확대가 야기한 인플레이션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
 - ❖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정부재원은 증가하지만, 늘어난 통화량으로 국민 재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'인플레이션 조세' 현상 발생

